

김상곤 출사표...더민주 당권 '3각 구도'

“호남출신, 宋표 잠식” “경기교육감 이력 秋에 마이너스”

손익계산 분주...이종걸 막판 출마 검토, 전대 변수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1일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권 경쟁은 추미애-송영길-김상곤의 3각 구도로 재편됐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로 그동안 밋밋했던 더민주 당권 레이스의 흥행에 불이 붙일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김 전 위원장의 가세로 당 안팎에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진문제인)계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친문계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의원과 송 의원은 그동안 친문 진영의 지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여러차례 보여왔다.

김 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추진했던 온라인 당원 입당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의 힘은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온라인 10만 당원 가입과 총선 승리가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친문계의 표가 세 갈래로 분화하면서, 결국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과 송 의원 측도 김 전 위원장의 가세가 어느 쪽의 표를 더 잠식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광주일고를 졸업한 만큼 ‘호남표’를 가져가면서 송 의원에게 다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 출신의 송 의원

을 지지한 친문 진영 인사 가운데 일부가 김 전 위원장 측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이 경기도 교육감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추 의원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줄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호남 출신인데다 친문계와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내 역학 구도 등 현실을 감안하면 양강 구도를 흔들 만큼의 파괴력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더라도 여차피 친문 인사들 간의 경쟁이 되는 만큼 전대가 역동적으로 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더십과 정체성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

심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으며 외연을 확대하고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이끌만한 새로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더민주가 대선을 앞두고 역동성과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사들이 전대에 출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현재의 구도로는 더민주의 달라진 모습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막판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전대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내 역학구도와 정치적 비전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든 고용 투자에 세금 혜택

세법개정 당정회의...서민생활 공제제 일몰 연장 요청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 투자 세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1대 신산업의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도 큰 폭으로 늘리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투자 지원대상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현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고용투자 세 혜택이 전체에 일괄 적용되고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이 생긴다. 세 지원의 문을 전체 고용투자에 전폭

적으로 연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이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기업집단 자산 총액따라 규제 차등화”

국민의당 개선안 발표...“5조·7조·50조 구간별 세분화”

국민의당은 현재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지난 2008년 5조원 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은 만큼 그간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정경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 주요 취지다. 개선안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5조원·7조원·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고 공시의 의무화하도록 하며, 7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합사 의결권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할 내용이다. 자산총액이 5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기업에 대한 일괄 몰아주기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3명 12시간 연설...국민의당 ‘사드 반대’ 장외 필리버스터

유튜브 생중계

安·千 전 대표는 불참

국민의당이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네티즌들을 상대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서울 마포당사에 차려진 연단에 릴레이로 올라가 반대 연설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첫 주자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김 의원은 손뼉말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북핵 위기가 생길 때마다 TV에 늘 나오는 북한 장사정포다. 휴전선 부근에만 수천문이 있지만,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모순이 많다고 주장했다.

6번째 주자로 나선 최경환 의원은 “사드 배치 선언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 외교 보복, 안보 보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핵과 미사일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로 얻게 될 경제·외교·안보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봉을 받은 주승용 의원은 “한국은 미국·일본·EU의 수출을 다 합하여도 대 중국 수출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국의



“유튜브에 뒀네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마포구 당사에서 진행 중인 사드배치 관련 필리버스터의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적 피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한국은 역대 정권부터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KAMD와 킬체인 개발을 2020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해왔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이제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드를 배치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13번째 발언자로 나선 운영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 ▲중국의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위기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소원화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 와해 가능성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안철수·전정배 전 공동대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당내 간 대화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에도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소속의원 가운데 22명과 조성은 비대위원이 연설자로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당권 판도, 수도권이 관건

주자들 이반된 민심 되돌리기 심혈...컷오프제 도입 확정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의 당권 판도는 수도권 표심이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을 잡지 않고는 무너진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의 민심 이반이 4·13 총선의 결정적 패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반사효과’다. 이 때문에 전대 출마자들은 수도권을 승부처로 여겨 이 지역을 공략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수도권 표심은 최근 불거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 개입’ 논란과 맞물려 이번 전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박(비박근혜)계 주자들은 수도권에서 낙선·낙선한 당원에 ‘친박 혐오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전대에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기준 정수를 당 대표 5명, 최고위원 12명, 청년최고위원 5명 등으로 각각 정했으며 출마자 숫자가 이 기준에서 2명 이상 초과할 경우에 컷오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